

인권을 외면한 기술과 치안산업의 그늘: 2024-2025 국제치안산업 대전 현장 조사

김한민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2024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10월 23-26일)에 이어, 2025년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제7회 박람회(10월 22-25일)가 개최되었다. 경찰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AI Policing For All’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치안 및 보안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국민을 위해, 함께 안전하게’(2024)에서 ‘AI Policing For All’(2025)로 이어진 슬로건의 변화는 한국의 치안산업에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감시 기술 개발과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는 국내외 경찰 구매담당자, 군·소방·해경·지자체 관계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바이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치안 기술의 수출입과 상용화를 논의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24년에는 205개사가 참가해 약 4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216개 기업이 851개 부스를 운영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그러나 기술과 치안산업 확장의一面에는 인권 위험도 함께 고려되고 예방되어야 한다. 공공 안전을 명분으로 전시된 저살상무기와 진압 장비 가운데 일부는 고문 또는 잔혹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국제치안박람회 일부 부스에서는 유엔 고문방지특별보고관이 「고문 및 잔혹·비인도적 대우에 악용될 수 있는 장비의 국제 거래에 관한 보고서」¹에서 금지 또는 규제를 권고한 장비가 전시·홍보되고 있었다. 또한 2025년에 이루어진 현장 관찰에서는 AI 기반의 이른바 ‘스마트 치안’ 기술이 대거 등장하며, 감시·통제 기능이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축적된 조사 결과는 한국의 치안산업이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인권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전’의 논리가 무분별한 ‘통제’로, ‘보안’의 명분이 광범위한 ‘감시’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의 인권 실사 강화와 국제적 규제 논의의 병행이 필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장비 전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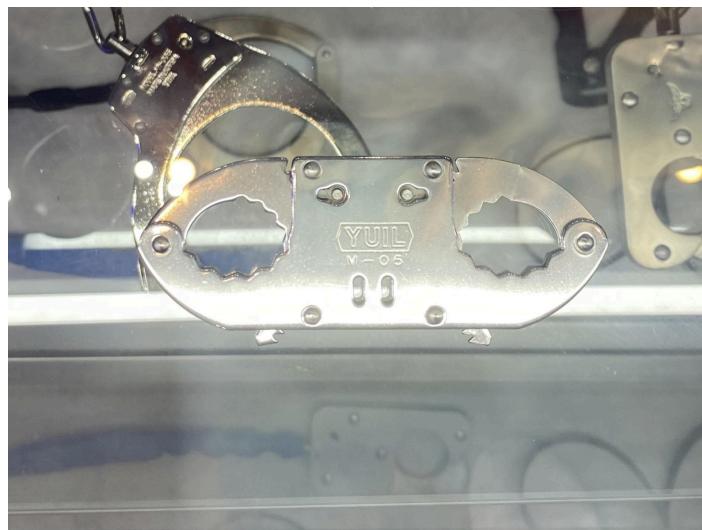
¹ Thematic study on the global trade in weapons, equipment and devices used by law enforcement and other public authorities that are capable of inflicting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 General Assembly Document A/78/324.

(1)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품목의 예비목록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법 집행 장비에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굴욕감, 또는 모멸감을 주는 기술적 요소가 있거나, 보다 덜 해로운 수단으로 장비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이라고 판단한다. 보고관은 고정형 구속장치, 직접전기충격장치, 다중운동충격발사체² 등의 장비들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엄지수갑_요일기기산업

엄지손가락을 서로 밀착시킨 채 고정시켜 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단단한 금속 수갑이다. 엄지수갑은 신경 손상이나 손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수감자가 엄지수갑을 착용한 채 넘어질 경우 2차 부상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위험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에서도 해당제품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기충격 장봉_Infos

² 운동 충격 발사체는 고무탄, 플라스틱탄, 화학자극제 등 운동 충격 또는 화학적 자극을 주는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저살상 무기로, 단발, 연발, 압축 공기 발사 등 그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다. 다중운동충격 발사체의 경우, 분산되는 발사체를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

한국의 군사경찰장비 업체인 인포스는 다양한 형태의 곤봉을 소개했다. 일부 장봉과 다단봉의 경우, 6만 볼트 전압의 전기충격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전기충격이 인체에 직접 전달되는 장비는 목, 머리, 생식기 등 취약한 신체부위를 포함해 전기 충격을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DC)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전기충격봉은 다른 장비로 달성하지 못하는 전술적 유용성이 없으며, 고문이나 다른 형태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자의적인 위험이 너무 크다”며 그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평의회 고문방지위원회(The European 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Torture) 역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전기 충격 장비의 사용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법 집행 공무원은 통제해야 하는 사람과 접촉 거리가 있는 경우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길이 1m가 넘는 장봉의 경우, 표준적 길이의 봉보다 더 큰 충격을 전달해 과도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금지가 권고되는 제품이다.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전시된 Infos의 최대 길이 1200mm의 장봉은 전기충격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이중의 위험성을 지닌다.

(2) 규제권고품목의 예비목록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만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가하는 데 오용될 수 있는 품목들로,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허리고정형 구속도구, 운동충격발사체, 전기충격기, 화학자극제 등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테이저건_Infos, AXON

두 해에 걸쳐 다양한 업체의 테이저건이 전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부스의 경우 테이저건 발사체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테이저건은 보통 권총 모양의 소형 무기로, 가는 와이어에 두 개의 발사체가 달린 카트리지가 하나 이상 장착되어 있다. 이 발사체는 카트리지에서 발사되어 와이어에 의해 총기에 부착된 채로 표적에 전기 충격을 전달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전압이지만 범위와 전압 및 지속 시간에 따라 충격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무기는 폭력적인 사람을 원거리에서 무력화시키는 데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신체의 취약한 부위를 겨냥하거나 반복적으로, 혹은 장시간 충격을 가하는 경우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 충격은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대상을 무력화시키며 근육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해쳐 이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각각 한국과 미국의 회사인 Infos와 AXON은 2024년과 2025년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테이저건 (전기충격기인)을 전시했다.





운동충격발사체_ [Lotus International](#), SNT모티브

한국의 저살상무기 제조업체 로터스 인터내셔널 Lotus International은 시위진압 목적의 운동충격발사체를 최루탄처럼 보이는 모형과 함께 전시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총기회사 SNT 모티브 역시 다양한 종류의 저살상/저위험 권총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체험부스를 제공했다. 운동 충격 발사체는 고무탄, 플라스틱탄, 화학자극제 등 운동 충격 또는 화학적 자극을 주는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저살상 무기로, 단발, 연발, 압축 공기 발사 등 그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장비는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연속형 운동충격발사체는 부정확하고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그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한 번 발포되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준율이 심각하게 떨어져, 주변의 행인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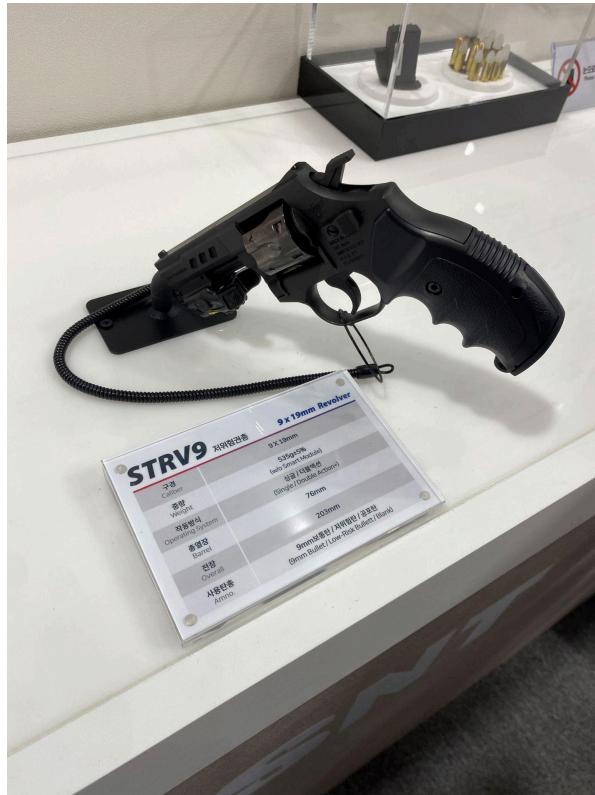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설명) 최루탄 처럼 보이는 모형과 함께 전시되어 있음.



- 저위험권총 STRV9



플라스틱 구속도구_유일기기산업



국내에서는 일명 ‘케이블타이’로 알려진 플라스틱 구속도구가 여러 점 전시되고 있었다. 플라스틱 재질의 구속도구는 쉽게 과도하게 조여질 수 있으며, 많은 종류가 이중 잠금 기능이 없어

풀어주거나 느슨하게 만들 수 없고, 잘라내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다. 또한 폭이 좁기 때문에, 장기간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조여질 경우 골절이나 신경 손상 위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³

국내에서 플라스틱 구속도구 사용은 규제나 관리 지침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진압에 나선 계엄군이 취재중이던 기자를 불법체포하는 데 플라스틱 구속도구가 사용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당시 이 도구가 사용된 체포가 “헌법상 보호된 신체의 자유·언론자유,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고문 금지·자의적 구금 금지·표현의 자유 등 중대한 권리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⁴

군중통제장비 전시 현황

대지정공_물대포, 차벽, 장갑차



³ Amnesty International, *Tackling the Trade in Tools of Torture*,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2016, p. 27.

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2·3 계엄군의 케이블타이 체포, 심각한 인권 침해다」, 2025.

Available at:

<https://amnesty.or.kr/133569/blog/12-3-%EA%B3%84%EC%97%84%EA%B5%B0%EC%9D%98-%E%C%BC%80%EC%9D%B4%EB%B8%94%ED%83%80%EC%9D%B4-%EC%B2%B4%ED%8F%AC-%EC%8B%AC%EA%B0%81%ED%95%9C-%EC%9D%B8%EA%B6%8C%EC%B9%A8%ED%95% B4%EB%8B%A4/>

2025년 치안산업박람회에서 대지정공은 물대포 차량, 차벽, 장갑차 등 다양한 형태의 진압장비를 선보였다. 물대포 차량은 수십 미터 거리에서도 고압의 물줄기를 직사로 가할 수 있어, 얼굴·머리·흉부·고령자 등 취약한 신체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한국에서는 2015년 물대포 직사로 인해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 이후, 집회현장에서 물대포가 쓰이지 않고 있다.⁵ 국제적으로도 물대포는 무차별적·비례성 결여·치명적 위해 가능성 때문에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장비로 평가된다.⁶ 국제앰네스티 역시 물대포가 다른 장비로 달성하지 못하는 특별한 전술적 이점이 없고, 직사 충격 시 사망을 포함한 중대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평화적 집회에서의 사용 금지를 여러차례 권고해왔다.

한편 장갑차는 집회·시위 환경에서 군사적 대응 패러다임을 강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장갑차는 기본적으로 충격 방호·군중 돌파·무력 전개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로, 이는 평화적 집회 관리의 비례성·최소침해 원칙과 충돌한다. 한국산 장갑차는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적 집회를 진압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바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군사용 차량의 집회 배치가 “참가자에게 위협적 환경을 조성하고 집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며, 비무장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군사화된 장비 사용에 대해 경고해 왔다.⁷

클리카_AI 기반 군중밀집도 측정 기술

⁵ 2020년 헌법재판소는 물대포 직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⁶ UN OHCHR, *Protecting protests: UN anti-torture mechanisms call for responsible use of force and protection of peaceful assembly*, 26 June 2025.

⁷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Militarised approach to policing peaceful protests increasing risk of violence and human rights abuses*, 20 June 2022.



클리카는 AI기반의 군중밀집도 측정기술을 소개했다. 클리카 부스 한 쪽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집회장소 밀집인원 측정 장면이 중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AI 기술은 표면적으로는 안전관리 도구로 소개되지만, 한편으로는 집회 참가자 감시 강화·표현의 자유 위축·예측 기반 표적화 위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감시와 각종 데이터 수집이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라도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⁸.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집회 현장에서 수집되는 영상 자료나 군중 흐름 분석과 같은 기술적 처리 역시 참가자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다. 대규모 영상·위치·행동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 역시 관련 기술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지점이다. 이에 따라 집회 관리에 활용되는 디지털 감시 및 분석 기술은 데이터 최소화와 목적 제한 등 기본적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인권 기준과 사전적 영향평가를 충족해야 한다.

인권검토 없는 치안산업

국제치안산업박람회 현장조사는, 치안·보안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수출 확대의 이면에서 인권 침해 위험이 체계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부

⁸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7 on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Article 21)*, CCPR/C/GC/37 (2020), para. 40.

부스에서는 유엔 고문방지특별보고관이 금지 또는 규제를 권고한 장비가 여전히 전시·거래되고 있었고, 한국 내 사용이 금지된 도구가 수출용으로는 적극 생산되는 등, 국제 규범과 국내 규제 사이의 괴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또한 2025년 현장에서 포착된 AI 기반 치안기술의 확산은, 공공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감시와 통제의 위험성을 시급히 검토해야 함을 확인하게 했다.

이러한 현실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인권 보호 장치의 마련과 검증 절차를 앞서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박람회 주최 측과 정부기관은 전시·거래되는 모든 치안 및 법집행 장비가 국제인권기준, 고문금지 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충족하는지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 인권침해 위험이 명백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금지·규제 권고가 제기된 장비에 대해서는 전시 제한·거래 금지·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조·수출 기업 또한 단기적 경제 이익보다 장비의 사용이 타국에서의 고문·부당대우·집회탄압에 기여할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는 고문 없는 무역 조약(Torture-Free Trade Treaty)을 비롯한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치안산업 역시 기술 혁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인권보호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함께 안전한 세상’은 장비의 성능 또는 기술적 정교화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기술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에 두는가에 따라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발행: 전쟁없는세상

후원: 하인리히뵐재단 동아시아사무소



HEINRICH BÖLL STIFTUNG
SEOUL
East Asia | Global Dialogue